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6. 5. 24 .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신동화 간사 02-723-5302)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대 표 자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인)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캠페인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5,000명	조직년월일	1994.9.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2	FAX
2.	감사대상기관	청와대 정무수석 및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 청와대 민정수석		
3.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2)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3) 재향경우회의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루 혐의에 대한 감사			
5. 청구 이유	[별지 1]			
6. 기 타	-			
7. 관련 증거 자료	[첨부자료]			

※ 단체등록증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첨부

[별지 1]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
청구

감사청구 배경

몇 년 전부터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 행정관의 임무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 하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이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도 확인되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유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정부를 옹호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1) 이러한 추 사무총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극우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또한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4) 허현준 행정관이 극우단체를 동원하고 친정부 집회·시위를 지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처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시사저널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허 행정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허 행정관은 4월 20일 오후 시사저널 기사가 나기기 전에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하였고(증거서류 1), 이후 어버이연합은 4월 21일에 시사저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저널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밝혀(증거서류 3),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우단체로 하여금 언론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협의문자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결부되어 있다면 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지시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원도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는 허 행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 1384호 기사를 허위보도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며, “허 행정관은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2) 허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통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극우단체들로 하여금 친정부 집회·시위를 열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 대변인은 4월 25일에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봤을 때 청와대의 극우단체에 대한 집회사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졌다면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관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비서관에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설령 청와대가 허 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허 행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하여 그것에 맞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체조사는커녕 개인의 문제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지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허 행정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혹은 고의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허 행정관의 상관이자 해당조직을 관리해야할 책임자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1월, 12월에 각각 198만원, 500만원 약 2,000여 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2월과 3월 ‘반국가 중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 집회 후에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도 2014년 4월~11월에 2,5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증거서류 6)

그런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향경우회와 공동 투자해 지분과 배당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가 극우단체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5월 10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와 함께 삼남개발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SDNJ홀딩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우 민정수석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가족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개발은 매년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증거서류 7, 8, 9)

실제 2015년 3월 26일 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SDNJ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서류 10)

배우자 일가의 삼남개발 지분 공동소유로 재향경우회와 관계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 및 제5조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를 한 허 행정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또한 보고를 받는 윗선으로서 허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지시한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를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관련 증거자료

<증거서류 1>

[단독]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월4일 집회 개최 요구 거절, 1월6일에 집회 가져"

시사저널 | 입력 2016.04.22. 15:57 | 수정 2016.04.22. 22:50

‘탈북자 알바’ 논란에 휩싸인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안부 합의안 체결 이후 허 행정관이 집회를 열어달라고 했다”고 시사저널에 밝혔다. 추 사무총장은 “시사저널의 보도<4월20일 ‘[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 집회 지시했다”’>가 나가기 직전 허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 탄압에 나섰다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어버이연합은 지난 4월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시사저널사 앞에서 회원 120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저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버이연합 핵심 인사는 4월18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며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집회는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가리킨다. 어버이연합은 심인섭 회장을 비롯해 고문, 부회장, 공동대표, 사무총장, 국장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추선희 사무총장이 도맡아 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이 4월21일 시사저널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시사저널 이종현

청와대 “기사 내용 사실 아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가자 청와대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4월21일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22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 행정관이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찰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지시를 내린 인물로 지목된 허 행정관은 21일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22일 법원에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허 행정관은 언론을 통해 “어버이연합은 지난 1월6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것만 봐도 시사저널의 보도는 오보라는 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해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 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고 설명했다. 추 사무총장은 이어 “지시가 떨어지면 (단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는다. 서로 먼저 집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보수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시사저널 규탄 집회 청와대가 요구했나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움직여 언론 탄압에 나섰다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추 사무총장은 “4월20일 오후 시사저널의 ‘청와대 지시’ 기사가 나오기 전에 허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내가 기사가 없는데(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나서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기자가 허 행정관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한 직후였다. 당시 기자 신분을 밝히자 허 행정관은 “업무 중”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문자메시지를 통해 취재 목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문자메시지에는 ‘허 행정관님이 보수단체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 행정관이 기자의 취재 요청 직후 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보수 집회를 지시했다’는 문자만 보고 바로 어버이연합에 연락을 취한 셈이다.

허 행정관은 보수 성향의 탈북단체들을 사실상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행정관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한 ‘전향386’과 ‘시대정신’이라는 단체의 핵심 멤버였다. 대학 시절 좌파 운동가였으나 1990년대 후반 노선을 갈아타 보수 진영에 참여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단체 대표 7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탈북단체가 주도한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 허 행정관을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수차례 만났다.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 만난 적도 있다”며 “허 행정관이 탈북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보수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기사가 4월20일 나가자 후폭풍이 거셌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행동부대를 매수해 정부 입장을 지지하게 하고, 다수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사주 의혹은 날날이 규명돼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어버이연합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버이연합 측은 4월21일 시사

저널리스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사저널의 보도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흔드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기자는 이날 저녁 7시쯤 시사저널사 인근 사무실에서 추 사무총장을 직접 만났다. 추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 어버이연합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허 행정관과 나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시사저널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 건드리면 우린 못 참는다. 우리는 또 (집회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탈북단체 대표 L씨는 “시민단체, 그것도 보수단체가 현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당장 돈줄부터 끊길 것이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일개 시민단체가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이 허 행정관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청와대가 집회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를 청와대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집회’, 아베 댕비난, 박 대통령은 지지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를 열성적으로 지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어버이연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안 관련 집회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1월6일 가진 집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강력 규탄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성명서에서 ‘위안부 문제 타결에 있어 돈을 앞세운 일본의 처세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진심 없는 사죄를 비판하면서도 합의안을 체결한 다른 한쪽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오히려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외교적 결실이며 미래지향적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용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추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박근혜 정부를 때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집회는 또 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 장부<4월19일자 [단독] 어버이연합, ‘비박’ 김무성 규탄 집회에도 알바 동원> 기사 참조>에 따르면, 어버이연합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청 청사와 박원순 후보 캠프 등지에서 이른바 ‘농약 급식’과 관련한 ‘박원순 규탄 집회’를 가졌는데, 이 집회에 167명의 탈북자 알바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4월21일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돈을 쥐 이분들을 거리로 내보내 어버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상식 이하 행동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다”면서 “(서울시장) 취임 전 어버이연합이 아름다운재단에 와서 내가 여자인 줄 알고 데모를 한 적이 있다. 이들이 동원된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시사저널은 허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4월22일에만 일곱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두 통 남겼으나 연락이 없었다. 또 같은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기자 신분을 밝히고 연락을 달라는 메모를 두 차례 남겼지만 역시 답변이 오지 않았다.

안성모·조해수·조유빈 기자 / asm@sisapress.com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거서류 2>

[단독 인터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집회 관련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협의를 했다"

[JTBC] 입력 2016-04-22 20:46 수정 2016-04-24 15:11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버이연합은 JTBC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직접 의문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추선희 사무총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회견에서 일단 전경련에서 거액을 지원받은 역대 지원이죠. 저희가 제기한 의혹인데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하셨고 공익사업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익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이죠.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종묘공원에 있는 어르신들 무료급식입니다.]

[앵커]

무료급식의 석 달치가 1억 2000만원이나 될까 일단 의문이 들거든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후반기 거죠.]

[앵커]

후반기요? 후반기면 언제 후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2014년에 저희가 공모를 4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앵커]

재작년에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벤엘복지재단을 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후반기에 나오게 된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전경련의 사회공헌예산이란 게 연간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내역이 어버이연합 지원한 건 없습니다.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러니까 뽀엘복지재단이라니까요.]

[앵커]

뽀엘복지재단에 지원한 게 10억 중에 포함돼 있다.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건 잘 모르쥬.]

[앵커]

전경련의 사회공헌 예산에는 어버이연합으로 결과적으로 들어간 1억 2000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거든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버이연합이 받은 것이 아니고 뽀엘복지 재단으로 받은 것입니다.]

[앵커]

뽀엘복지재단에 지급한 내역도 없습니다.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여쭙보고 싶은 내용은 사회공헌 예산으로 10억을 해 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뽀엘복지재단을 통해서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집행한 게 아니냐, 과연 그 돈의 정체가 뭘냐 궁금하거든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일단 저희는 무료급식. 종묘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고.]

[앵커]

언제입니까?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게 7, 8월 달쯤에 신청을 했습니다.]

[앵커]

2014년 7, 8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것이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통과가 돼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전에는 전경련쪽에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떨어졌습니다.]

[앵커]

떨어졌습니까? 같은 내역 무료급식인데요?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전경련하고 계약을, 협약을 맺고 한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경련쪽에서도 이게 한두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 근거를 남겨야 될 텐데 영수증은 물론 제출하셨겠죠.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영수증 제출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이 사진,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식사를 하시는 이런 사진과 안보견학을 갔을 때 그 사진과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앵커]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고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아니요. 사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과 밑에 식당에서 저희가 부식비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아서 같이 제출한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에서도 예산을 집행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영수증 근거를 남겨야 나중에 세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할 텐데.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제가 드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앵커]

전경련에 영수증을 다 제출했다고요? 앞서서는 말씀을 안 했다고 하셔서. 사본은 갖고 계시겠죠.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사본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앵커]

찾아보면 있다. 전경련 입장에서 수역을 지급을 하고 영수증,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지출했는지 근거가 없

다면 이게 배임도 될 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래서 잘렸어요.]

[앵커]

잘리다니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2015년에 예산이 그래서 잘린 거고. 내부 고발자가 어버이연합이 이게 투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음해성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노인복지로 예산을 줄 수 없다 해서 잘렸습니다.]

[앵커]

딱 6개월, 하반기 것만 받고 그 이전도 이후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거죠.]

[앵커]

아까 기자회견에서는 뽐엘선교재단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고 더 있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통장을 저도 아직 보지 못했고 저는 그때 카드로만 썼었어요. 사모님께서 매일 사무실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버이연합 의정부 지부장님이시지만 매일 사무실에 나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저희가 돈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경련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쭙보면 이게 공교롭게도 2014년 9월 5일이죠. 이게 4000만원이 입금된 날인데 바로 다음 날에 어버이연합측에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시위를 열었거든요. 그 전에 전경련 쪽에서 계속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던 게 그 전 주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은 차원입니까? 아니면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까?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저희는 누가 시켜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 어버이연합은 2007년도에도 저희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래서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그 보수정권이 들어섰을지언정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을 위해서 저희는 2010년도까지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누가 지시한다고 지시에 움직이고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앵커]

어버이연합이 전체 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단체입니까?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네.]

[앵커]

그렇습니까?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저희 사무실에 사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 사진만 있습니다.]

[앵커]

그 중간 대통령은 다 빼시고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를 했죠. 청와대 배후설이 있다. 특히 일본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집회를 부탁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그거 참 시사저널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해명도 했지만 제가 여기서 녹음을 공개해 드릴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스탭하고 녹음을 들었는데 그 녹음에도 그 사람이 유도리 있게 했다. 그러니까 지시로 좀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저는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앵커]

지시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게 누가 한 말씀이죠?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시사저널이요.]

[앵커]

시사저널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저는 시사저널에서 그 얘기하길래 저는 지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협의를 했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거 종북. 정대협이죠? 정대협이 종북 성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한일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수요일날 수요집회 때, 위안부 때, 그때 나가서 우리가 아베를 할 것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 같은데. 추 총장께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내 뒤에 청와대가 있다,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저는 그런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지금 내부고발자들, 그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앵커]

내부고발자?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지금 공금 횡령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에 구속될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이러한 얘기를 JTBC 같은 공영방송에서 그 사람 말을 신뢰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누구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버이연합 내부에서도 들었고 탈북자단체에서도 들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의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러 고소고발도 직접 하였고 경실련 수사 의뢰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수사는 당연히 받으실 텐데 그 경우 가장 핵심이 전경련 돈은 왜 받았으며 어디에 집행했느냐, 그 근거인 영수증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말씀이시죠.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저희는 무료급식입니다. 어르신들의 무료급식과 그다음에 안보견학 이걸로 저희가 받은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지금 이 소위 경비, 탈북자들 경비 그걸 얘기하셨는데 제 빛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배후설은 근거 없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와전됐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누가 있다, 겁낼 거 없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청와대에 누가 있다. 저 청와대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행정관 아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

[앵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저런 말씀들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이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또 하다가 의혹들이 또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다시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추선희/어버이연합 사무총장 : 감사합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

靑 행정관 “어버이연합과 업무 협의” 시인

시사저널 출판금지 가처분 재판서

“통상적인 업무수행 일환일뿐

집회 열어달라 지시는 안 했다”

靑 선긋기 불구 논란 증폭 예상



지난해 8월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심현철기자 shim@koreatimes.co.kr

청와대 행정관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의혹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협의를 한 적은 있다’는 행정관 측 공식 입장이 나왔다.

행정관 측은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시사저널 보도는 부인했지만 청와대와 어버이연합 간 커넥션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이건배) 심리로 진행된 시사저널 1384호 출판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행정관과 시사저널 간 공방이 이어졌다. 허 행정관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측 무료 변론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유죄 판결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측 변론을 맡았던 김기수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시민소통비서관실 주요 업무가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버이연합을 상대로)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적은 있으나 문자 메시지로 집회를 열어달라 또는 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업무 연장선에서 협의를 했다, 의논을 했다고 지시를 했다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시사저널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22일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 4일)에 열어달라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허 행정관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의혹이 실린 시사저널의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신청은 시사저널 소재지 관할인 서부지법으로 이첩됐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 측은 시사저널 보도에서 제기된 관제 데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심문 과정에서 허 행정관 측이 어버이연합과의 협의 자체를 인정해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 측 변호인도 허 행정관과 추선희 사무총장의 권력관계에서 양측의 소통은 지시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측 박응석 변호사는 “일개 시민단체에게 청와대 행정관의 권고나 제안이 있었다면 일종의 지시로 읽혀지는 것이 상식”이라며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만 않았을 뿐이지 조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또 “집회는 시민사회가 의견 개진할 통로인데 청와대가 여기에 관여했다면 민주주의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된다”며 “이는 사적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문제”라며 보도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 측은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것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이냐는 ‘지시’라는 두 글자에 있다”면서 “99% 진실이더라도 1% 거짓말을 섞으면 허위보도다. 집회 지시는 과거 권위정부 시기에나 있을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에 뭐 하러 어버이연합을 보내겠나. 오히려 정부 업적을 깎아 내리는 일”이라며 “도리어 나가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9일까지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 받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거서류 3>

[단독] 어버이연합 측 "허 행정관이 JTBC앞에도 가라고 했다"

시사저널 규탄 집회 연 어버이연합 측 증언..집회 이용해 '언론 탄압' 의혹

시사저널 | 입력 2016.05.02. 17:05 | 수정 2016.05.02. 19:57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보수단체의 물리력을 동원해 '언론 탄압'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을 상대로 규탄 집회를 열었던 어버이연합 측은 허 행정관이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궁지에 몰리니 추(선희) 총장님한테 전화한 것"이라며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JTBC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JTBC 가서 뭘 잘한 게 있어 어버이연합을 떠들어댑니까? 그래서 복수당하고 있는 건데"라며 "자기(허 행정관) 살려고 지금 어버이연합을 내보내려 그런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이 4월21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시사저널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어버이연합은 당초 4월25일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앞에서 'JTBC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추 사무총장은 4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요일부터 JTBC 집회에 나간다. 거기서 한번 싸워보자"고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시사저널 보도<단독>"청와대 행정관이 집

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가 나간 뒤 추 사무총장을 비롯한 어버이연합 핵심 간부들이 잠적하면서 JTBC 규탄 집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어버이연합 측은 허 행정관이 '시사저널 규탄 집회'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추 사무총장은 4월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사저널의 '청와대 지시' 기사<[단독]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 집회 지시했다"> 기사 참조>가 나오기 전에 허 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오히려) 내가 기사가 없는데(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나서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기자가 허 행정관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한 직후였다. 기자 신분을 밝히자 허 행정관은 "업무 중"이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마찬가지로였다. 결국 문자메시지를 통해 취재 목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문자메시지에는 '허 행정관님이 보수단체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기자는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았다. 허 행정관은 기자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뒤, '보수 집회 지시'라는 문자 내용만 보고 바로 어버이연합에 연락을 취해 '나서달라'고 한 것이다. 실제 허 행정관이 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인 4월21일 어버이연합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시사저널 사옥 앞에서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저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허 행정관은 4월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개인 명의의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4월22일에는 법원에 해당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384호 출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4월2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사저널 1384호가 이미 판매 완료된 시점에서 가처분 판결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이 '언론사 압박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모·조해수·조유빈 기자 / asm@sisapress.com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거서류 4>

[어버이연합 대화 공개] "집회 지시 안 들으면 예산 지원 다 잘라라 했다"

시사저널 | 입력 2016.04.27. 15:42

어버이연합 측이 청와대의 보수집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허헌준 행정관이 지시했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어버이연합 외의 다른 보수·탈북 단체들도 허 행정관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시사저널은 지난 4월20일 ‘[단독]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제하(題下)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수집회를 지시한 윗선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지목되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단체는 4월26일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어버이연합 측은 당초의 증언과 달리 청와대와 ‘협의’ 내지는 ‘사전 조율’ 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허 행정관 역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384호에 대한 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4월26일 열린 공판에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협의를 한 적은 있으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사저널은 취재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측 핵심 인사들과 나눈 대화를 최대한 원 대화 내용 그대로 공개한다.

기자는 4월18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등을 통해 청와대의 보수집회 개최 지시에 대한 증언을 접한 후 수차례 확인 작업을 거쳤다. 특히 청와대 보수

집회 지시와 관련된 보도를 하기 전에 어버이연합 측에 기사 내용을 정확히 밝혔고 어버이연합 측도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추선희 사무총장은 기사가 표출되기 전인 4월20일 오후 5시경 ‘허 행정관이 지시를 한 건 맞잖아요. 팩트(fact)잖아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말 그대로 지금 이 시민단체들 다 개(허 행정관)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다른 단체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라고 다시 한 번 묻자 추 사무총장은 “다 알지 개네들. 지네들끼리도 경쟁 붙었으니까”라고 말했다.

김미화 대표도 같은 날 오후 4시와 6시경 두 차례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어떤 개인감정을 가지고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이 ‘자기 말 안 듣는다. 반말 짹짹한다’ 그래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가 ‘그게 일본 위안부 그 때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그렇죠. 그거죠. 예.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책임은 그 ×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추 사무총장은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1월4일 집회를 열라고 했으나, 이 말을 따르지 않고 1월6일 집회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4월22일 [단독]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기사 참조>.

김 대표는 허 행정관이 탈북.보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과 관련해 “황장엽 선생 때 같이 있어서 탈북자 단체장들이랑 연루가 많이 돼 있어요”라면서 “그래서 탈북자 단체장들하고 연루가 돼 있고 아주 탈북자 단체들을 움직여갖고. 지금 보세요. 탈북자들 알바 동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 이거 방치하고”라고 말했다.

어버이연합 측은 허 행정관에 대한 ‘피해의식’도 드러냈다. 허 행정관의 말을 듣지 않아서 “복수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허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보수단체 같은 거를 겨냥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건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라며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기사를) 터트려버리면 지금 현 정부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라면서도 “어차피 지금 보수단체가 다 터졌으니까 애(허 행정관)가 안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을 깐다(밝힌다)고 그러면 깔(밝힐) 거예요. 저도 협조를 할 건데”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4월30일 시판되는 시사저널 1385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안성모.조해수.조유빈 기자 / sisa@sisapress.com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거서류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 216(시사저널 1384호 출판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

<증거서류 6>

[단독] 재향경우회, 탈북자 단체 계좌에 수백만 원씩...

[JTBC] 입력 2016-04-17 20:39 수정 2016-04-22 11:30

[앵커]

어버이연합이 일당을 주고 탈북자들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가 탈북자들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탈북자 단체의 계좌 내역을 입수했는데요, 여기엔 재향경우회 명의로 수 백만원씩, 그것도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신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과 3월, 서울시내에서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책결 국민대회'

재향경우회가 집회신고를 한 이 자리에는 어버이연합 회원 등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 사흘 후, 경우회는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을 한 탈북단체에 송금합니다.

그보다 앞선, 2014년 12월엔 500만원, 11월엔 19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때도 경우회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돈이 입금된 탈북단체의 임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대한 인원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탈북단체장 : (통장에 들어온) 인건비가 집회(동원)비용이지요. 교통비예요.]

하지만 재향경우회는 해당 계좌내역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향경우회 관계자 : 우리는 그런(돈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재향경우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와 종북세력 척결을 자신들의 주요 업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2013년엔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 1300여차례 집회신고를 해 다른 집회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향경우회 홈페이지에는 퇴직 경찰 135만명을 정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치안과 경찰 복지를

위해 일한다고 돼 있습니다.

=====

더민주 "어버이연합 사건만 멈춰...특정 의도 있다"(종합)

이춘석 "전경련, 청와대 뒤에 숨지 말고 입장 밝혀야"

백혜련, 우병우 靑 민정수석 연루 의혹 제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박정하 인턴기자 | 2016-05-10 12:01:47 송고



1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3차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6.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위원장은 10일 "어버이연합 사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특정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운호 법조사건, 어버이연합 사건 등 3가지 사건 중에 유독 어버이연합 건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멈춰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진상조사 TF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대한 질의했지만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만을 받았다"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니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와 관련자 출석 등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면서 "전경련도 더이상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도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회로서는 실제적 진실을 밝힐 별도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조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재 문제는 관련자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경련과 국정원이 어떻게 연결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모종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총체적으로 밝히는 게 불법자금 게이트의 핵심"이라며 "저희는 우선 전경련 대해 필요한 액션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전경련뿐만 아니라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에서도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라는 회사가 50%씩 투자해 삼남개발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지난 2014년과 지난해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각각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백 위원에 따르면 SDNJ홀딩스의 주주구성을 보면 우병우의 장모가 20%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 4명이 20%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또한 "2014년 4~11월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의혹 제기됐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시기가 2014년 5월"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위원장과 박 간사를 비롯해 이철희·이재정·진선미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TF는 이날 표창원·박주민 당선자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한편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그 뿌리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정권 내내 정부를 옹호하는 시위에 앞장섰고,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시위도 거기(어버이연합)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당시에도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는 물음에 "그렇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런 시위에는 굉장히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박승주 기자, 박정하 인턴기자(parksj@)

<증거서류 7>

어버이연합 꼭짓점은 '리틀 김기춘' 우병우?

더민주 백혜련, '청와대-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 커넥션 문제 제기

16.05.10 11:22 최종 업데이트 16.05.10 12:13

글: [소중한\(extremes88\)](#)

사진: [유성호\(hoyah35\)](#)



▲ **청와대-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 커넥션 지적하는 백혜련**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3차회의에서 백혜련 당선인이 청와대와 재향경우회, 어버이연합 등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백 당선인은 재향경우회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11월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약 2,500만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재향경우회 주최 집회에 참석한 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게 총 3차례, 1,700만원 자금 지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편집: [박순옥\(betrayed\)](#)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이 이른바 '어버이연합 커넥션'의 새로운 꼭짓점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백혜련 더민주 국회의원 당선자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3차회의에 참석해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간 2014년 5월과, 재향경우회가 탈북단체들에게 자금이 지급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백 당선자는 '우 수석-SDN홀딩스-삼남개발-재향경우회-어버이연합'의 관계에 주목하며 "청와대,

재향경우회, 어버이연합 등 커넥션 의혹"을 설명했다.

"검찰, 성역없는 수사 나서야"

백 당선자에 따르면, 기흥컨트리클럽의 운영사인 삼남개발은 재향경우회(삼남개발 주식 50% 보유)에 2014년, 2015년에 각각 23억원, 2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급(2014년 4월~11월 총 29차례 약 2500만원, 2014년 12월~2015년 3월 총 3차례 1700만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남개발은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SDNJ홀딩스의 주식은 우 수석의 장모 김아무개씨가 20%, 김씨 자녀(우 수석 아내 포함) 4명이 각각 20%씩 갖고 있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2008년 사망)이 재향경우회로부터 인수한 골프장이다. 이 회장은 기흥컨트리클럽 인수 과정에서 전직 치안총수 등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1993년 6월).

종합하면,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재향경우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 등에 여러 차례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백 당선자는 "우 수석은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담당 주임검사였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 임명된 최윤수 국정원 제2차장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라며 "'리틀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불리는 우 수석이 대한민국 사정·정보 라인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잘 수사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당선자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검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라며 "더민주 TF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우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거쳐,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다(관련기사 : [재력가 사위, '리틀 김기춘' 꿈꾸나](#)).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거서류 8>

2016.3.11., 삼남개발 주식회사 감사보고서(2015년)

〈증거서류 9〉

2016.4.22., 주식회사 에스디엔제이홀딩스 감사보고서(2015년)

〈증거서류 10〉

2015.3.2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6호(관보 제18477호),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